

제43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6일(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 국토교통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1
-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2분 개의)

○소위원장 전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국토 분야를 심사하고 이어서 교통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정부에서 제출한 안과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 동의하고 위원님들 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 마지막에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4분)

○소위원장 전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 분야 소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건이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 분야 총 6건은 정부안에 있는 4개 사업에 2개의 신규 추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1쪽, 정책연구개발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도심주택공급 확대 방안 연계에 따라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번 추경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쪽은 신규 의견으로 첫째,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월세 지원금액을 현재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 그러기 위해서 650억 원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는 주택도시기금 사항으로 청년 내집마련 특별대출 이차보전을 위해 3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기금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증액의 결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에 반영할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3쪽입니다.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 사업에 4억 원 증액이 정부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중동 사태로 인한 분쟁 발생 증가 예상 등을 고려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및 반해서 지난 이삼 년간의 실행행위를 감안했을 때 연내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기반 대금직불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 3300만 원이 신설되는 것으로 추경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금지급시스템 구축 전에 ISP 수립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반면에 추경안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관련 법률 개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혹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제도개선 방향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쪽은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 관련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추경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대비하여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로 법률이 통과될 경우를 감안해서 13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 6쪽은 부대의견인데요, 총 6개 부대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1번·2번은 추가 증액 검토 사항으로 노후 산단 재생사업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과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및 장비에 대한 유류비 보조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입니다.

3번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합리적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견이고요.

4·5·6번은 최소보장제 관련이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의 2분의 1로 최소보장비율을 검토한다거나 혹은 나머지 5번·6번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으로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

다 혹은 예산편성의 절차적 문제점을 충분히 소명하고 향후 재발방지에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 차관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정책연구개발사업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비 10억 원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미안한데 정부가 정부안 유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전용기 순서대로 하시지요.

꼭 그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라면 편하게 말씀 주시고 그러면 하나씩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6건밖에 안 되니까요.

○김희정 위원 순서대로 합시다.

○소위원장 전용기 순서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종욱 위원 제가 할까요?

○소위원장 전용기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욱 위원 제일 첫 번째 있는 거요, 뒤의 것도 의견 있는데, 이게 용역비 10억 원인데 이번에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조그만 소액 사업들, 뭐 2억 4억짜리 이런 것을 추경에 담아 오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고 필요하면 전용이나 정부 예비비도 많잖아요. 그런 것 하면 될 걸 갖다가 추경에다 이런 걸 다 들고 와서 정부에서 설명하고 위원들이 토론하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안 맞는 것 같고, 특히 이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수도권 동부권 광역교통체계는 지난번 발표한 1·29 대책 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발표부터 해 놓고 뒤에 추경에 이제 와서 교통체계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게 정부가 참 들고 오기 좀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추경안에서는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종양 위원 김종양 위원인데요.

맞아요. 이종욱 위원 이야기했듯이 이게 전형적인 끼워 넣기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전쟁 추경이니 이런 거 내세워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하나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오히려 추경의 어떤 그런 취지를 갖다 퇴색시키려 하는 거지. 그런 대표적인 어떤 선례인데 자꾸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냥 쑥쑥 해 가지고 그냥 이거 엮고 저거 엮고 이래 가지고 오히려 추경예산 편성 취

지에 맞게끔 그렇게 지금 맞는 어떤 그런 사업들만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꼭 이번에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전쟁 추경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를 갖다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나는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이거.

○**손명수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사실이 애로가 아주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은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유류비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삶 전체가 사실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의식주 중의 하나인 주거 아납니까? 그런데 주거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오랫동안 이게 사실 논의해 온 내용이기도 한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계속 주거 신축, 주거를 공급하면서 교통 대책이 먼저 마련되는 게 맞지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잘 못 해 왔어요. 그런데 결국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입주할 하게 되는데 입주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통 대책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전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언제나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주거지를 만드는 데 교통 대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취지가 사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또 메시지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과 이종욱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양 위원** 아니, 여당은 모든 걸 내란, 전쟁,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부예산 왜 편성해요? 맨날 그냥……

○**손명수 위원** 아니, 예산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걸 필요할 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필요한 거니까 하는 거지요.

○**이종욱 위원** 아니, 딱 한마디만……

○**소위원장 전용기**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아니, 1·29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했는데 그 전에 교통 대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날 바로 했었어야지 이걸 기다려요, 준비할 때까지? 그러고 국회에서 안 해 주면 안 할 겁니까? 발표하고 그다음 날 바로 용역 안 뒀으면 용역을 했었어야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 불인정하면 안 할 거예요, 이거?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위원님, 1·29 공급 방안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광역교통개선협의체를 지자체하고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지금도 지자체의 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남부권과 동부권에 대한 주민들의 교통 대책에 대한 어떤 열망 그리고 그런 것이 사실 민생 안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교통개선 대책 이 부분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광역교통개선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지금 용역비를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이게…… 차관님, 요즘 힘드시지요, 주택공급 때문에.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결과 없는데. 이게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면 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진 수요가 있는 서울 시내부터 해 가지고 접경 지역 여기에는 주택공급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은 135만 호 공급 대책 발표하고 그 공급 대책 대부분이 문재인 때 실패했던 미분양 지역, 외곽 지역, 즉 실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 여기에 공급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이제 거꾸로 교통을 좀 편하게 해 가지고 실수요를 이쪽으로 늘려 보겠다, 수요자들을 그쪽으로 유도해 보겠다 이런 방안 같은데 그게 말이 됩니까?

주거지, 내 집 마련의 실수요가 단지 교통 문제만입니까? 아니잖아요. 교육, 문화 등등 해 가지고 그중의 하나가 또 교통 편리성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거 다 제치고 이거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28억이 편성돼 있는데 10억을 추가하겠단? 이거는 아니지요.

그리고 광역교통위원회가 뭐 때문에 국토교통부 산하에 따로 있습니까?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광역교통 이거 지금 제대로 해 보자고 만든 조직 아닙니까? 그 조직이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빨리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라고 본예산 28억을 편성해줬잖아요. 확정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되지 1·29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게 메시지가 있다? 오히려 욕 얻어먹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위원님, 한말씀……

○**김도읍 위원** 오히려 욕 얻어먹는다고요.

○**소위원장 전용기**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위원님, 남부권하고 동부권에 사실 지금 남부권에만 해도 택지개발지구가 29개 지구가 있고 약 30만 정도의 호가 들어가……

○**김도읍 위원** 알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동부권도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알고 있어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동부권, 특정 지역은 내가 이야기 안 할게요. 그거 다 미분양 지역이에요, 경기 남부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실수요가 교통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소위 전쟁 추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나요? 결국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정책 실패를 자꾸 이런 데로 지금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기식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예산이 지금 28억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연구비는 아닙니다.

○**김도읍 위원** 뭘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사업비입니다. 본예산에 있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정책연구개발사업비 28억 7800만 원 본예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그 28억은 우리 국토교통부의 정책개발용역비

입니다. 이래서 정책개발연구비인 거고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 10억을 별도로 지금 수도권 남부하고 동부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부탁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주택공급 여기도 똑같은 데거든요. 맞잖아요, 남부하고 동부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17년에 남양주 쪽에도 했었습니다,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나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그래서 지금 과천 지역……

○**김도읍 위원** 이게 그래서 전쟁 추경하고 맞냐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그리고 전쟁 추경의 목적이 이번에 민생 안정도 있었습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전쟁 추경이라고 하지 말든지.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소비쿠폰하고 지금 이점몇조 그게 뭐……

이거는 추경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주택공급 정책 실패를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손명수 위원** 차관님, 그렇게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기초실에 있는 정책연구개발사업비로 지금 할 수 있냐 그게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책연구개발사업비는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각 실국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한 1억짜리, 2억짜리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럽섬(lump sum)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예산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 10억짜리 교통 대책을 위한 개발사업비로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그걸 하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10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 정책연구개발사업비의 용도하고 지금 전혀 다른 용도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이미 그 사업들은, 기존의 연구용역 사업들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실국에서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 각 실국의 한 일이 억짜리 모아서 한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두 분만 말씀 듣고 보류하든지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김희정입니다.

일단 지금 대화를 들어 보면 추경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본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추가경정예산 심사고 추경의 목적이 전쟁 예산이라는 건 분명한데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옆에서 실장이 답변하는 것 중에 남양주 연구용역 했던 것까지 언급하시는데 2017년 수도권 동북부 지역 광역교통대책 평가 연구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혹시 연구용역 기간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12개월 걸렸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다음에 2025년에 수도권 동북부권역 통합교통대책 수립 연구용역 9억 8000 들여서 했었는데 이때 얼마 걸렸습니까? 기간 얼마 걸렸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15개월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연구용역 추경으로 넣기 위해서 밀어 넣느라고 기간 얼마로 산정해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8개월입니다.

○김희정 위원 12월 안에 끝내야 되니까 숫자 맞춰서 가지고 오신 거지요. 현실적으로 추가경정에 맞게 신속하게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게 올해 안에 투입될 수 있는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다라는 게 기존의 과업 기간하고 비교에서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위원님, 내년에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 전에 용역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김희정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요. 그런데 아까 손명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전쟁 때문에 민생이 더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쟁 안 있었어도 가지고 올 예산이었잖아요, 1·29 발표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서 날짜 짜깁기해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수행이 될지, 올해 안에 긴급 투입될지 별개로 이재명 정부가 발표했던, 그냥 졸속으로 발표했던 1·29 방안에 부가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원장 전용기 마지막에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신다면서요.

○이연희 위원 저도 한말씀 잠깐……

○김희정 위원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지구 지정 들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1·29 공급 방안 예산이라고 내놓고 얘기를 할 경우에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공급 및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대부분 언제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보고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27년 중에 약 3000호, 강서 군부지라든지 중랑 면목행정타운,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등 약 3000호가 착공이 가능……

○김희정 위원 그런데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된 지역 사업들은 대부분 28년에 시작하는 걸로 보고하셨어요. 앞뒤 말이 맞지 않다는 말씀 재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답변 빨리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이라든지 태릉은 택지지구로서 큰 거기 때문에 지금 지구 지정 제안 단계를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심대한 타격이 전개되는 그런 비상경제 상황이고, 특히 민생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민생 중에 특히 부동산 관련한 부동산 안정도 매우 큰 민생 안정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1·29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공급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부동산 공급이 수도권에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이 민생 안정에 매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은 여야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정부 때도 진행했던 공급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전 정부 현 정부를 떠나서 주택공급에 많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9 대책 이후에 관련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통과 관련한 용역을 하시겠다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야당 위원님들 지적대로 원래 이게 바로 추진이 되면 좋았는데 마침 추경 편성이 되니까 여기라도 예산을 태워서 지금 주택공급을, 특히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에 하겠다는 취지인데 저는 정부가 그런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에 약간의 결함을 인정하더라도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차관님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주택 업무를 해 왔습니다.

○김도읍 위원 토지거래허가제 그다음에 개발이익환수제,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차관님 생각은 어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규제개혁은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시장에서 지금 필요하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실수요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강북의 재개발지 가 보세요. 이 업무를 전문성이 있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데 왜 안 합니까?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 규제개혁 정부에서 왜 안 합니까? 차관께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왜 안 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된다는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시장뿐만 아니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미분양 지역, 외곽, 경기도 화성·의정부 이런 쪽으로 계속, 지금 LH가 갖고 있는 땅들이 다

거기 아니에요. 거기에다 135만 호 충족하려고 하니까 다급한 거지요. 그러니까 교통이라고 어떻게 해 보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주여건은 교통뿐만이 아니잖아요. 답이 있는데 왜 안 하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은 이념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을.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개발이익환수제라든지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는 찬성을 하고 대통령실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래서 못 한다. 맞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위원님, 지금 이 정책연구비는……

○김도읍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만 답을 해 보세요. 맞나요?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대통령실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서로가 주장이 엇갈리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제 뜻대로 주택공급 정책을 못 편다. 제가 듣고 있는 이게 맞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그렇지 않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왜 안 하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방금 보고드렸듯이 지금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분들이 동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이라든지. 그래서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규제개혁 논의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 한마디만 하고 정리할게요.

모든 시장 상황의 기본 원칙이 뭐니까? 수요·공급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래프 아닙니까. 수요·공급 이론에 있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안정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제하고 개발이익환수제 손보자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좋아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동부권이든 남부권이든 광역교통체계 개선하는 것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왔느냐, 그리고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 주택정책 하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연희 위원 차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정부가 이념으로 부동산 정책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아닙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똑바로 답변을 하셔야지.

○안태준 위원 차관한테 할 게 아니고,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잠깐만요. 마무리 짓고요.

특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동산 문제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된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특히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 거고 그 부분이 일정 정도 작용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집값은 안정된 거잖아요,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거기에 플러스 주택공급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안태준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 정책 가지고 자꾸 이념 얘기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느 정부가 해도, 어느 이념을 갖고 있는 정부가 해도 주택공급 정책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공급만 가지고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택 정책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가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왜 토지거래허가제 안 해주느냐, 규제 철폐 안 해주느냐 이러는데 공급을 서울에 많이 하면 가격이 내리나요?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상황에 맞추는 정책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도 차관님 답변하시는 것에는 약간의 유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도 솔직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위원님들 지적이 일견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올 게 아니고 실제로 본예산 편성을 했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언젠가는 추경을 해야 하는 일인데 마침 추경이 생겨서 들어온 거지요. 거기에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도에도 일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는 것이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급히 추진돼야 되는 일인데 빠져 있어서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도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10억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정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런 논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제가 바라는 얘기는 주택공급과 관련한 얘기는 제가 항상 그전 정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잘못하면 다음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전 정부가 잘못된 일은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이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념적인 얘기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에 정부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결론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정리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번 주택토지실 소관으로, 지금 1번 건은 보류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넘어가고 주택토지실 소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것 기금이라서 수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추경 항목이 없어서.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나번 사항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나번만 안 되고 위에는 되고?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이종욱 위원** 그리고 청년월세 20만 원에서 30만 원도 좋은 거잖아요. 국토부 웬만하면 동의하시면서 이것은 왜 또 정부안 유지예요? 반대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아닙니다. 저희는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정부안 유지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위원장 전용기 일부 동의는 어디에 있나요?

○이종욱 위원 청년월세 20만 원을 30만 원, 이것 민주당에서도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김은혜 위원님 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지 않고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안입니다.

○이종욱 위원 지원 대상도 확대하세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그런데 청년가구 평균 월세가 39.4만 원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금액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까지 완화를 하면 그 대상이 넓어지니까 오히려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면 증액 예산은 526억입니다.

○이종욱 위원 526억?

○이연희 위원 650억에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이종욱 위원 아니, 단가도 올리면 좋잖아요. 어차피 국토위 여기서 증액한다고 예결위에서 받아 줄 건 아니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위원님들께서……

○이종욱 위원 국토부 입장에서야 단가도 늘리고 대상도 늘리고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연희 위원 정부에서는 526억을 동의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저는 정부안이 좋다고 보는데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정부에서 동의하는 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안태준 위원 지원 대상 확대로 해서……

○손명수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증액되는지 만들어서 의결 전까지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금액도 올리면 되지, 기왕에. 공급도 못 하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김은혜 위원님께서 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집행하는 데 있어서 대상을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대상은 확대하는데 금액을 올리는 건 안 돼요?

○손명수 위원 금액이 39만 원인데 30만 원을 하는 건 좀 안 맞다 이런 얘기잖아요. 평균이 39만 원인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평균 월세가……

- 이종욱 위원 요즘 수도권은 80만 원까지 올라갔다던데, 대학가.
- 김도읍 위원 뭐가 안 맞는데? 평균을 따지면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택공급 정책 실패하는 바람에 지금 전월세 품귀현상에다가 급등하고 있는데 좀 올려 주지, 왜요?
- 안태준 위원 김은혜 위원님 안을 반영해서 올리는 걸로 하시고요. 김은혜 위원님의 안에서 출발한 거니까……
- 손명수 위원 526억을 증액하기로 했다니까, 526억을 증액하잖아요.
-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상만 확대하겠다는 거지.
- 이연희 위원 서로 조정하시지요. 김은혜 의원안으로 하시고 대상을 확대하는 걸로 해서 526억 증액하는 걸로 하시지요.
- 김도읍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
- 김종양 위원 그러면 1176억이 돼야 되는데.
- 손명수 위원 그렇지. 그것까지 다 올리면 그렇게 되지.
- 안태준 위원 그건 올리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 손명수 위원 그러면 차관님, 대상을 확대하지 말고 김은혜 위원님 안대로 일단 올려요, 차라리 예결위 가서 논의하도록.
-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 소위원장 전용기 동의하시는 겁니까?
의결 전에 동의하시는 부분을……
-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동의하겠습니다.
- 김도읍 위원 아니, 그것 또 동의를 해요?
-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아니, 김은혜 위원님……
- 김도읍 위원 김은혜 의원안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민한 끝에 올렸을 건데 여기서 손명수 위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동의…… 이게 말이 되나.
- 안태준 위원 차관님 대답 잘하셔야 된다니까, 진짜.
- 김도읍 위원 본인 쌤짓돈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장난도 아니고.
- 손명수 위원 선택의 문제니까.
- 소위원장 전용기 확대하느냐, 돈을 더 주느냐 이게 선택의 문제였는데 확대하지 말고 그러면 돈 더 주라는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니까 정부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 이연희 위원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 김도읍 위원 이연희 위원님 말씀이 맞지.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끝까지 버티든지 아니면 같이 해 가지고 두 가지 다 병행해서 1100억 얼마로 증액을 하든지.
- 안태준 위원 김은혜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구하셨고 그 증액의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 김도읍 위원 아니지요. 증액의 방법이 아닌 증액의 내용이지요.
- 안태준 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 김도읍 위원 그건 안 맞지.
- 소위원장 전용기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으니까요. 의결 전까지 다시 안전 정리해서 제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택토지실 소관도 보류하고 건설정책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이건 전쟁 추경이네, 딱.

○이종욱 위원 차관님, 여기 전쟁 추경 카테고리에는 맞는데 정점식 위원이 지적했듯이 실집행이 사실 30~60% 되고 나머지 다른 사업으로 다 전용하던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올해는 집행이 잘 된다는 전제하에서 한 건지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누구 실무자가 해도 좋고요. 매년 50% 집행을 다 못 하던 사업인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종욱 위원 예, 해외 컨설팅 지원.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건설국장입니다.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관련입니다.

과거 코로나의 경우에 예상치 못한 수요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었었고 일반적인 평시에 약간 지원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들이 저희 해외건설협회를 통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법률상 분쟁에 대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요가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번엔 믿고 하시지요.

○안태준 위원 논란이나 이런 일이 없었을 때는 사실 컨설팅이 안 들어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전쟁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상당히 기업들로부터 이런 요구가 많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예, 기업들 수요가 많습니다.

○안태준 위원 이걸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이것은 정점식 위원님 안……

○김희정 위원 저는 의견 얘기하겠습니다. 봤더니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순위 조정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가 됩니다. 보니까 564억 이상 편성돼 있는데 타당성 조사 22억 원 들어 있고요. 시장 개척 공동협력 사업이 28억 8600만 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어 있는데 이 4억 원에 대해서는 본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만 조정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들고 왔다는 게 앞뒤 말이 맞지 않고요. 정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 실집행률이 36.3~64.7%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가능성도 굉장히 큼니다.

다음으로는 내용인데요. 법률·세무 컨설팅 지원 단가하고 횟수 상향하겠다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중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수급 불능하고 물류망 마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컨설팅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단가 조정하느라고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해결되는 데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김도읍 위원 건설국장님!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건설국장입니다.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사업이 24년보다 25년 예산 절감을 요구해서 가지고 일부 소폭 줄여 가지고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가지고 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컨설팅 부분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수요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 문제가 있고 또 일부 인원 추가 투입이나 안전관리 측면의 문제까지 같이 발생하고 있어서 복합적인 부분에 대한 예시 정도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김석기 국장님!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예.

○김도읍 위원 건설국장님, 김석기 국장님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난번 전체회의 때 나프타 수급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지요? 국장님 의아해하시지 말고, 국장님 직접 업무입니다. 지금 국내 건설현장이 상황으로 가면 레미콘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언제쯤 스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저희가 산업부와 지난 금요일 회의……

○김도읍 위원 산업부 이야기하면 안 돼.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월평균 나프타 수급을 위한 혼화제는 5000톤 정도가 필요하고 5000톤 생산을 위한 중간재를 롯데케미칼로부터 안정적으로 납품을 받기로 산업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도읍 위원 결론이 났나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예.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레미콘 업계 대표자를 만나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였고 보텀업과 톱다운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동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게 발생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전체회의 때 수급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한 오전 그 시점까지만 해도 한 달 이내에 레미콘 문제 때문에 건설현장 올스톱이 예상된다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해결됐네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지적을 해 주셔서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빨리 뛰게 되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어찌 됐든 해결이 됐네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일단은 해결이 됐는데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해결은 되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이 부분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점식 위원님 안하고 뒤에……

○김도읍 위원 문제 제기한 김희정 위원님한테 물어봐야지.

○소위원장 전용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희정 위원 저한테도 와서 설명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설정책국 소관 사안도 따로 김희정 위원님께 보고하는 걸로 하고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의견 있으세요? 있으시면 주셔도 됩니다.

○이종욱 위원 이번에 가져온 추정 사업 중에 저는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이 사업으로 보이는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 어디에 있지요? 국토부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예, 국토부 소관 건설산업정보원에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건설산업정보원?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예.

○이종욱 위원 거기서 무슨 계약을 하나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여기가 건설공사등록대장을 전자정보로 관리하는데 그것이 건설산업정보망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거지요. 별점 관리 뭐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 내에 지금 대금지급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대금지급시스템하고 계약시스템하고 따로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지금 조달청 계약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대금지급시스템 그러면 계약하고 따라다니는 건데 계약은 다른 데서 하고 대금지급만 이쪽 시스템에서 하겠다는 발상이지요, 지금. 맞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지금 대금지급시스템은 네 가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활용하는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체불제로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상생페이시스템이 있고 또 민간에서 활용하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시스템들을 각자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디 따라가는 거예요? 상생 따라가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저희는 건설공사정보망에 건설공사 기본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금지급시스템이 연계되게 되면 체불 정보랑 불법 하도급 정보가 같이 AI 기반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부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걸 해 가지고 성과를 보여 주고 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지금 내용이 너무 복잡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조달청이 제일 큰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사 계약 기준으로 보면? 하도급지킴이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조달청은 공공공사 약 50조 규모에 대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민간공사 한 200조 규모에 대해서는 각각의 다른 시스템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민간 시스템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공공 부문 내에서 보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각 개별 발주하는 기관들 있지요? 여러 가지 철도공단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쪽 있잖아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중소기업부의 상생페이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상생페이시스템은 민간 쪽에서 하는 거고……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그건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건 좀 다른데, 저는 상생을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지금까지 대금지급시스템은 계약시스템에 거의 따라왔고 지금 필요한 것처럼 가상계좌를 통해서 압류 안 되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었다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계약하고 관계없는 국토부 안의 시스템 내 대금지급시스템을 따로 가져가겠다는 그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문제의식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조달청 시스템은 건별 계약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그것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공사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지금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연계해서 계약대금이 지급되게 되면 해당 건설공사 전체에 대한 건설공사 과정과 흐름 그리고 고용, 하도급 분야가 함께 연계되어서 굉장히……

○이종욱 위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 문제의식은 가상계좌 방식을 통해 가지고 대금체불 문제 발생을 차단하자는 거잖아요, 아이디어가.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상계좌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달청 시스템과는 달리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자재·장비·납품업자까지 함께 보호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하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그런데 더 큰 강점은 국토부 시스템이 건설공사등록대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건설공사에 실제 필요한 자격자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공사 내용에 맞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까지가 상호 검증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AI 기반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종욱 위원 잠깐만. 그것은 보완적인 기능이고 기본적으로는 조달청에서 아니면 철도공단에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이게 계약시스템 내에서 대금지급시스템으로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상계좌 방식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문제 제기로 이 시스템이 나오는 건데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가상계좌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조달청 시스템이라든지 철도공단 시스템이라든지 다 놓고 그걸 바꿀 생각을 해야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가 어쨌든 공공 부문 내에서는 메이지잖아요, 메인 시스템이잖아요. 그 메인 시스템을 제도개선하려고 해야지 왜 옆으로 나와서 기존에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내에 또 계약과 무관한 그런 대금지급시스템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느냐는 문제 제기예요. 필요하다면 총리실이나 이런 데서 전체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를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지 기존의 조달청 메인은 놔두고 국토부에서 별도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

그리고 이것은 대금지급시스템은 계약시스템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지 별도로 다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태영 위원 제가 한말씀……

○소위원장 전용기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염태영 위원** 이종욱 위원님 의견 하여튼 잘 들었고요.

지금 체불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커지니까 쪽 여러 사례를 보니까 철도공단의 체불e제로시스템만 체불이 없어서 그 방식이 뭔가 봤더니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이었다.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중간에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게 쪽 해서 마지막 노무자와 자재·인건비까지 가도록 하게 한다. 이 체제로 바꾸는 것을 시스템상 점검해 보니까 전혀 그 방법으로 해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체불이 없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관련되는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시행규칙도 바뀌서 이 시스템을 반영하기로 하고 그래서 당장 이걸 하는 체불e제로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정부 내에서는 다 이미 동의가 됐어요.

그런 단계 이후에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여기에 그때 일치시켜야 될 몇 가지 사업들을 정리해 주는 거라 저는 이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반드시 정부 내에서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공사 식별번호를 단일화한다든지 사용자 중복 등록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용역을 별도로 한다는 것이어서 전혀 이것은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1억 3000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체불을 막기 위해서 정부 간에 전체 시스템을 맞춰 놓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김희정 위원** 잠시만……

○**소위원장 전용기** 예.

○**김희정 위원** 김희정입니다.

제가 앞서 기초설 정책연구개발 사업 얘기를 할 때도 그냥 추경에 맞춰 오기 위해서 기존에 실제 진행한 것과 다르게 이 프로세스를, 개요를 가지고 온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이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김희정 위원**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실제 구축비용을 또 편성하려고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김희정 위원** 그러면 사전 용역 수행은 언제 하고 결과 언제 나오니까?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쪽 하시라고요, 본사업까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추경안을 통과해 주시면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해서 하반기까지 ISP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사전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냐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금년 가을이 목표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지금 저희가 금년 9월까지의 ISP가 완료될 것으로…… 그게 복잡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은 완료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 본예산 또는……

○**김희정 위원** 지금 차관하고 국장하고 쪽지 준 사람하고 대답이 다르잖아요, 저한테 문건 온 거랑. 한 명은 연말이라 했다가 연내라고 했다가 가을이라고 했다가 9월이라고

했다가.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 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은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요.

○김희정 위원 제 질문에 답하세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예산 편성 정부에서 언제 들어갑니까?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 7~8월에 들어갑니다.

○김희정 위원 결과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 중간 결과물이 나옵니다.

○김희정 위원 완전 결과물 언제 나오냐고요. 6월 달에 들어가서 무슨 7월에 결과가 나와요?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 중간 결과물이 7~8월에 나오고요.

○김희정 위원 제가 중간 결과물이라 물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전 이것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설명하시는 것 들어 보면 대금직불시스템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정보화 사업으로 가기 위한 큰 픽처 안에서 사전 용역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몇 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몇 년도까지 가지고 갈 건지를 하는데, 본예산에 가지고 와서 국회에서 이것 너네가 사전 연구용역 지난번에 해 줬으니까 큰 구찌 그냥 슬쩍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 들어 보면 전체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위원님……

○김희정 위원 쭉 다시 설명하세요. 용역부터 해서 본예산까지 그리고 사전 용역부터 본사업까지 어떤 날짜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 구축하려고 하는지.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 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입니다.

저희가 추경안 편성이 되면……

○김희정 위원 차관도 모르는 얘기를 국회에 와서 보고하고 있어요?

국장하고 차관 공부시켜서 다시 보고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문건으로 보고한 것하고 지금 구두로 보고하는 것하고 달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줬잖아요, 본 의원실에.

○소위원장 전용기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이 사업은 건설근로자 노동계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임금채불 근절을 위해서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고 그래서……

○김희정 위원 제가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숙원사업이 아니라거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전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오지 못했고 세 분이 이 용역에 대한 돈을 그냥 받아 간 다음에 이 용역을 결과로 해서 다음 정부가 본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일치시켜서 다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이 안건도 보류해야겠지요?

○이종욱 위원 보류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딱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가상계좌 방식이 이런 압류에 따른 대금지불 문제를 차단하는 데 아주 좋은 방식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감 때 여러 차례 확인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좋은 방식이구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국토부 주재의 새로운 대금지불 시스템을 만들 거냐 하는 것하고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상계좌 방식을 대한민국 계약시스템, 조달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것을 큰 의사결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이 대금지급시스템은 계약하고 같이 가는 거지 지금 상생처럼 따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상생은 민간 쪽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계약이 그쪽에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처럼 모든 돈이 거기에 모이더라고요. 거기에 모여서 대한민국 전국으로 다 흩어지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혼선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느끼기로는 가상계좌 방식을 지금 조달청이나 개별 발주하는 기관들에 다 적용을 시키면 되거든요.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총리실 주관으로 하든 국토부 주관으로 하든 전체적으로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별도의 대금지급시스템을, 계약 기간과 다른 별도의 대금시스템을 만들 건지를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을 가져오는 게 맞다 하는 그 의견입니다.

그런 것 참조하시고요 이것은 보류하시지요.

○안태준 위원 저도 이 얘기는 잠깐……

이종욱 위원님 큰 틀에서는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건설 쪽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건설에서도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회사와 회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과의 문제인데 일용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이 건설현장입니다. 그런데 건설현장 중에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금융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또 가장 많은 곳도 그곳입니다. 그래서 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없어요, 통장이 없어서. 그리고 등록하는 사람과 통장이 다르면 또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철도공단이나 지금 LH 같은 경우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큰 규모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장에 맞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정도 선에서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철도공단 쪽에서도 그랬고 LH 쪽에서도 그랬고 현장으로도 이게 나가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돈이 지급될 수 없는 시스템 그다음에 지급이 약 40일 정도 지연되는 시스템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말씀 일단 드립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안건도 보류하고요.

네 번째, 전세사기피해자지원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은 황운하 위원께서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정부안 유지의 답변을 남겨 뒀습니다.

○**김종양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에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대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동의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동의합니다.

○**손명수 위원** 부대의견 3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박용갑 위원님이 제기하신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합리적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동의한다고 돼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것은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피해금액의 3분의 2를 지금 선구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중요한 정책적 전환을 하잖아요. 저는 동의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전세사기범들이, 반환보증제도가 생기기 전후로 확연히 통계가 증명을 해요. 이 반환보증제도가 생긴 이후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매달. 독이 터졌는데 그 독을 막지 않고 이렇게 구제만 한다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도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전세금반환보증제도가 비아파트의 경우에 70%를 기준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2017년도에 이게 100%가 됐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7년 100%로 한 이후로 이게 조 단위로 아주 급증을 해 버렸고 지금 90%로 10%를 낮췄는데 전세 피해자들이 여전히 계속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피해자로 분류되지도 않아요. 가입도 못 한 사람들이 지금 피해자인데 그게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500~1000명씩 매달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보증금반환제도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전세가율이 비아파트의 경우에 50%를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생김으로 인하여 전세가율 이럴 보증률이잖아요. 전세가가 치솟았어요.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들이 엄청나게 비싼 전세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부가 만들었어요.

지금 70으로 낮춰도 사실은 이 제도가 생기기 전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그렇다고 이 제도가 만들어진 지 13년이 됐는데 이것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적어도 70으로 태초에 시작했던 것처럼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생기는 발생률은 현저히 줄어들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전히 높지만.

그리고 여전히 이게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라니까요. 전세가율을 높여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 깡투자로 이어지고 집값도 올리고 그래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렇게 하고 이 정책을 도입해야지 왜 이것을 안 고쳐요?

이것을 임대인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90을 70으로 낮추면 20을 집주인이 대신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전세대란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받은 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잖아요, 이것 전세가를 낮추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임대인들이 이미 오랫동안 혜택을 보던 것을, 그것도 받은 돈에서 20%를 더해서 돌려주는 건데 그게 두려워서 이 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법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고 그냥 HUG 규정이잖아요. 국토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고 국토부에서 하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내 일이라도 고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서 이 추경에 담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이고.

저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의견에 이것을 좀 구체화하고 적어도 이 추경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일단 시작했던 시점으로, 70으로는 낮추겠다…… 그리고 사실은 더 낮춰야 돼요, 이것을. 전세가율이 시장가보다 현저하게 높아져 버렸잖아요, 이 제도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한 거라니까. 고쳐야지요.

답변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7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대의견에 구체적으로 답아야 된단니까. 답아서 약속을 하고 집행을 하셔야지 왜 자꾸 이것을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시점이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이번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이것 논의를 했는데 그동안 선구제, 정액으로 선구제하는 것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복잡한 경매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논의했던 사항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야당에서도 동의를 해 주시고 해서 큰 정책적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일단 3분의 1에 대해서는 선구제를 하자. 저도 동의를 해요. 이게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의미 있는 정책적 전환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새로운 사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번에 부대의견에 답아서, 그러면 국토부도 일하기 쉽고…… 원래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이렇게 답아 주면 이걸 명분으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 지금 ‘부대의견을 구체화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이 얘기하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검토를 해서 방향은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한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세가율 90% 이상 부분에 대해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다는 실증적 자료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낮춰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임대사업자들이 처음에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받은 돈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다른 용도로 다 사용한 상태기 때문에 실제 돌려줄 돈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또 다른 전세사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완화하면서 방향성에 맞게 70%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낮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연말부터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대의견은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 단순히……

○소위원장 전용기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요건의 합리적 강화 방안’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세가율 90%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문구를 좀……

○손명수 위원 아니, 시기까지 못 박아야 돼요, 언제 어떻게. 그래야지 의미가 있지 자꾸 방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그 문구를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또 다른……

○안태준 위원 저도……

손명수 위원님이 한 2년째 계속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안태준 위원 지금 여기에서 하실 때, 그러니까 손명수 위원님도 공무원 출신이시고 해서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한꺼번에 막 명토 박듯이 할 수는 없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최소한 언제까지는 둘째 치더라도 어떻게 낮춘다는 정책적 목표는 제시를 하시고 그것을 한꺼번에 낮출 때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6년간 매년 5%씩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다음에 처음에 했을 때 임대인들에게 무리가 있다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보전책을 찾아 주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못 내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기왕에 그런 식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셨다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못 담는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그러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내로 발표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발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러니까 시그널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70%든 60%든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소프트랜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하든가 이런 방법은 정부에서 고려하더라도 그것은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수석전문위원, 부대의견이 지금 6번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심사하는 추경에는 5번, 6번 최소지원금 관련해서 예산만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세사기피해자제도 자체에 대해서 예산은 없어요. 그리고 1·2번은 더더욱 오늘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게 부대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사하는 예산이 없는데 우리가 이 부대의견을 다는 게 맞나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말씀드리자면 1번, 2번은 사실은 이것을 수정해서 신규 증액 의견으로 낼 수도 있고 부대의견으로 달 수도 있는데 제안해 주신 의원실에서 이것을 굳이 추경안을 수정하는 의결보다는 부대의견 정도로라도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김도읍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은 그러면 수정 증액 의견으로 해 가지고 심사를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요? 심사 대상도 아닌데…… 이게 우리가 그야말로 주에 대해서 부대하여 의견을 다는 건데 이게 맞는지,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국토위에서 올려서 예결위에서 관계없는 부대의견이라 해 가지고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묻는 거야.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원칙적으로 보면 예산안을 의논하시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나오는 게 맞는데……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써라, 저렇게 써라, 아니면 이렇게 써 보자 그럴 때 쓰는 게 부대의견 아닌가?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런데 1번, 2번도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김도읍 위원** 어디에 관련되는데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을 증액하자는 의결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김도읍 위원** 참내……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논의한……

○**김도읍 위원** 그것 검토해 봐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지금까지……

○**김도읍 위원** 아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문제없나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지금까지 전례로 봐도 예산까지……

○**김도읍 위원** 전례 따지지 말고 검토해 봐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검토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리고 지금 5번, 6번 최소지원금 외에 똑같은 취지로 3번, 4번도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것은 하지만 예산안 꼭지가 없거든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3번까지는 있고……

○**손명수 위원** 3번, 4번은 관계가 있지요.

○**김도읍 위원** 관계는 있다고 보지만 지금 5번, 6번이 최소지원금 문제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4번까지 최소지원금 문제고요 1·2·3번이 앞에서 논의하신 예산 사항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김도읍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해 가지고 정리하자고요.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까지 검토 다 한 이후에 부대의견도 다 새롭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전도 보류를 하고 교통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에 대해서 보류 사업을 제외한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은 교통 분야 심사를 마친 후 국토 분야 보류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교통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전문위원입니다.

교통 분야 6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교통물류실 소관 일반회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전세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459억 38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과 LPG 택시에 대해서도 경유 택시와 같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 전세버스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 화물차·택시·택배 운전자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철도국 소관 일반회계 PSO보상 사업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비로 보전하기 위한 예산 15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철도국 소관 철도계정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추가 구매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대경선 운행과 관련하여 예비차량 2편성 구매비 14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대광위 소관 3건입니다.

1번,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과 관련하여 내역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과 관련하여 증차 및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6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과 관련하여 모두의카드 정액형의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시스템 운영비 27억 원을 포함하여 66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시스

템 증설 및 고객센터 인원 확대 등에 필요한 2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착수금) 7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부대의견 1건입니다.

독일의 9유로 및 49유로 티켓 정책과 관련하여 국내 교통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하자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국토부2차관 홍지선입니다.

첫 번째, 유가보조금 지원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459억 38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지원 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유가보조금은 지방비로 지급하므로 국가 예산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 내용을 차량 교체 및 서비스시설 지원 등을 목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취지에 맞게 세부사업 명칭도 현재 유가보조금 지원에서 사업명을 '전세버스 산업 위기 극복 지원' 등과 같은 세부사업명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LPG 관련해서 중동 사태로 인한 LPG 가격 변동은 그간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3.8% 상승한 상태입니다. 저희 부에서 LPG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LPG 유가연동보조금에 대한 신설을 추후에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국 소관 첫 번째, PSO보상 관련입니다.

정부안 3995억 원에 대한 유지를 희망합니다. 도시철도는 지자체가 건설, 운영을 하고 운임 및 무임수송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무임수송 비용도 지자체의 부담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시철도는 특정한 특별시, 광역시에만 운영 중이므로 국비 지원 시에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는 추가로 건설비와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비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비 등에 대해서 지자체의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간접적으로 지원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추가 구매 지원 건입니다. 140억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총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입니다.

63억 원 증액 반영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음,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건입니다.

666억 증액 반영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세 번째, 27억 증액 반영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입니다.

7억 원 증액 반영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 건입니다.

김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이 정부 구성원 아니에요? 이게 전쟁 추경 맞아요? 뭘니까, 이게?

○**소위원장 전용기**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하나씩이 아니고 전체…… 어이가 없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시지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어이가 없어서 참 말을……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십시오,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심의를 하는데 계속 진중한 심의보다는 원칙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경색되게 흘러가고 심의의 내용이 본질에 관한 건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우선 유가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명을 뭐로 바꾸자고 한다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유가보조금 지원 자체는 지방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버스산업 위기 극복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지원하는 내용도 유가 보조가 아니라 차량 교체 및 서비스시설 지원 등에 대한 목적으로 변경을 요구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렇게 바뀌도 이 예산 내역의 근거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저희 법 시행령에는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에 유가 보조는 없고 대신에 시설 개량하는 항목은 있기 때문에요……

○**염태영 위원** 예전에 코로나 때 전세버스에 대한 예산 지원한 적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제가 그때는……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장 나진항** 교통서비스정책과장입니다.

전세버스 종사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운수업계 종사자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 감소분에 대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이것도 궁극적으로 그 목적에 유사한 것 아니에요? 전세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운전자 월평균 급여가 시내버스는 430만 원이 넘고 또 시외버스는 451만 원이고 그리고 전세버스는 235만 원 이런 정도로 현실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지금 한 대당 한 40만 원씩을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 아니에요? 월평균 급여가 워낙 낮은 전세버스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운전자 이쪽의 혜택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전쟁 위기로 인해서 전세버스의 수요가 훨씬 더 줄게 되는 데 대한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극복해 보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맞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할 하는데 사업명을 이렇게 붙이는 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어쨌든 간 위원님의 그런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단제가 말씀드리신 것은 유가보조금의 한도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명 명칭 자체가 국비 지원하고는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고려해 가지고 사업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전세버스 대당 유류비가 월 38만 원 이상 상승이 돼서 이분들의 월평균 소득이 16% 감소된다는 것이 현실적인 근거예요. 그에 따라서 대당 손실이 40만 원씩 계산된 이것을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것의 손실액을 어느 정도 보전해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지원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저는 긴급 유류비 지원의 내용과 손실보상의 내용들을 지금 사업명하고 잘 일치시켜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취지의 전세버스 지원 요청은 이 사업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일부 시행돼 왔던 사례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마땅히 넣었으면 좋았을 일을 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로, 추경 사업으로 이것을 꼭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윤종오 위원** 저도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주말에 관광버스를 한번 타게 됐는데요. 그전 같으면 한 50만 원 정도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60만 원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또 유가 올랐다는데 안 줄 수 없어서 그렇게…… 하여튼 소비자들은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통근버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운영하시는 분대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지금 일단 유가보조금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조금 돌려서 어떻게든지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또 지난번에 제가 지적도 했었는데 지금 대부분 1년간 장기로 해 가지고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학교든 회사든. 이런 부분에서 과도하게 유가가 올라간다는지 이럴 때는 계약한 주체 측에서 계약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주셔야지 한번 계약했다고 해서 1년간 계속 운영하게 되면 실제로 실컷 일하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알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저도 현실적인 질문……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을 국비로 지원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거도 없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버스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도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그렇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지금 윤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세버스 지원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현재는 지원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버스조합, 버스 운영하는 회사들의 의견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는 추가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취지에 동의는 하는데 이것을 현행 법령이나 현행 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법 중에, 그게 50조 1항인가 뒤에 지원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50조 1항에 있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래서 차량 교체 및 서비스 지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것 맞지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맞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러면 지원 항목을 그렇게 넣고 유가보조 등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 어떤 방법……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어쨌든 간 약간은 우회로, 회사에 여력이 있으면 이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것을 다른 기사분들의 복지, 수입을 위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안태준 위원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의 형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주체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장 나진항 교통서비스정책과장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한도는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금액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대당 40만 원씩 3개월 해서 120만 원으로 하되 저희가 유가보조금 항목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항목에 해당하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설 개선비라든지 차량 교체 비용으로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편성해 주신 예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교통물류실 소관 1건에 대해서는 정부 측 안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염태영 위원 그래서 정부 측 안이면 부동의예요, 동의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그러니까 수정동의입니다.

○염태영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소위원장 전용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수정동의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수정동의?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윤종오 위원 방금 그 전세버스 하나만 더……

○소위원장 전용기 예, 하나만 더 말씀하십시오.

○윤종오 위원 지금 회사나 법인들은 신청하는 절차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규제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부대의견에 넣을 안들은 정리해서 제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철도국 소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님이 증액 요청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동의해 주시는 부분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저희는 기존 정부안 유지……

○소위원장 전용기 정부안 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증액하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소위원장 전용기 저는 증액 의견이라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김희정 위원 저는 정부가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장관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 중에 이미 얘기를 했는데 정부는 앵무새도 아니고 지적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위원들이 몇 년에 걸쳐서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한 대답을 해야지 그냥 줄줄줄줄줄, 아니라는 팩트를 얘기했는데도 그걸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무료로 운송할 수 있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국가가 정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980년 국무회의 의결했고요,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니라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과거 대비 인구수도 늘었고 이동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추경예산에 넣으려고 했던 부분은 이분들은 밖에 다니려면 걸어서 다닐 수 없는 분들이니까 무조건 이용을 할 수밖에 없으니 이번에 넣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을 했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번 추경에 들어가지 않게 되더라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두 가지 면을 아까 반대 논리를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자체가 무임승차에 대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국가가 결정한 복지정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전적으로 지방에 전가하는 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철도가 일부 대도시에만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지역별 차등화 이런 얘기를 하면 먹힐 수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장관에게 질문을 했고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25년 3월 기준으로 6개 특별·광역시하고 경기도 인구 3452만 8000명, 전국 인구의 67.5%입니다. 즉 국민들의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교통서비스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편성하는 게 우리가 있더라도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함께 분담해야 할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토부가 그동안 죽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앵무새처럼 똑같이 ‘지자체고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답을 하고 있으면 전향적인 검토가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바로 직전에 지자체에서 근무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문제점은 법률에는 임의규정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이것을 100% 감면한다고 적어 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법률에 임의규정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것은 국가에서 감면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그것은 위임으로, 조례 사항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어쨌든 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하고 재정 당국하고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제가 좀……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십시오.

○손명수 위원 차관님, 질문 있습니다.

지금 일정 연령 이상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승차에 대해서 완전 무임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제가 아는 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손명수 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할인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손명수 위원 다른 나라의 경우에 할인정책은 다 있어요, 완전 무임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그 할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서 철도 운영자에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코레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

○손명수 위원 아니, PSO 그것은 다른 얘기고. PSO 보상은 경로 무임승차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국가유공자 등등 그다음에 특공 이것에 대한 보상이지 그게 아니니까.

과장이 답변해 봐요, 알면.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장 김현진 철도투자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PSO 제도개선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일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손명수 위원 아니, 그것을 할인해 주는데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할인해 주는 만큼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보조를 해 주는 정책이 외국에 있다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장 김현진 보조를 해 주는 정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장 김현진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이것 무임승차 각 지자체 손실, 서울이 작년엔 4488억, 부산이 1854억, 대구 672억 이렇거든요. 이게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도 없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양 부산교통공사에서 감당하고 있어요. 계속 부채만 늘어 가는 거지요. 이대로 놔두면 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그런데 또 노인 평균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차치하고 계속 매년 누적 적자율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도읍 위원 대책이 필요하지요. 지방정부, 지방공기업이 감당을 못 하니까 결국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논리 저런 논리가,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이런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 분명히 심각하게 봐 줘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방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차관님. 그렇지요?

그래서 애시당초 도시철도법이 발효가 되고 각 지방의 도시철도들이 건설될 때 원칙은 건설비만 부담해 준다. 그다음에 유지·수선·관리·운영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됐지만 2017년도인가 예산에서 유지수선비에 국비가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왜냐? 지방정부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지금 유지수선비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장 김현진 노후 시설 개량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시설 개량비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수선비 이런 것. 그것도 왜냐? 중앙정부가 볼 때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꼬를 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기재부 논리가 맞다, 안 맞다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서울교통공사 문 닫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김도읍 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은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요.

김희정 위원께서 추경에 부산 PSO 156억 했는데 저도 넣으려고 그러다가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 싶어서 저는 그냥 안 넣었어요. 안 넣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거든요. 다 합치면 전국적으로 한 7500억 정도 될 거예요, 작년 한 해 손실액이. 이것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차관님께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기재부하고…… 차관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할 때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 주십시오. 이러다 나중에 진짜 도시철도 다 올스톱되고 그런 지경이 안 온다고 누가 말을 합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김도읍 위원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것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도 상황에 안 맞으면 깨야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김도읍 위원 적극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국토부장관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박홍근 기획처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밝혔더라고요, 최근까지. 의원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기획처가 전향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똑같이 차관이랑 국장이랑 과장 나와 가지고 저런 답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대의견으로 ‘국토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무임승차 손실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한다’라는 내용을 넣었으면 합니다.

○**김도읍 위원** ‘지원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래야지.

○**김희정 위원** 어쨌든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한다’라는 의제를 남겼으면 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게까지 하시면, 재정 당국의 입장도 있는데……

○**소위원장 전용기** 적극 협의한다 이 정도로……

○**손명수 위원** 나는 다른 방향에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 안 하고 싶은데……

국토부차관님이나 담당 과장께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게 세계적으로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굉장히 오래된 논의 사항이고 많은 얘기가 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개념은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자의 손실이 아니고 기회이익을 못 보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다, 이게 저는 정확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50% 할인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똑같은 정책을 했으면 지금 손실로 표현되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한 8000억이다 그러면 한 4000억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 받지요, 우리는 아예 다 제로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아예 제로로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운영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매출을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못 올리는 만큼 국가 재정에서 보조하는 식으로 보조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의, 모든 나라의 사례처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냐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이것 굉장히 어려운 얘기에요, 어려운 얘기고 오랫동안 논의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자, 제일 쉬워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책임 있게 제시를 하셔야지요. 무조건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약간 오해가 있으셨면 죄송합니다. 무조건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할인율에 대한 문제, 지금 100% 할인이지만 할인율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노인 기준연령이 65세라고 있는 그 연령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지자체에 위임을 할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계속

이 법 시행령으로 갈 건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근본적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더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국토부는 어떻습니까, 김희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대의견에 이렇게 협의하는 내용을 넣고 가는 것 동의해 주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간 사회 각계각층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해당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니까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부대의견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그런데 시기를 정해 놓다기보다는 적극 노력, 협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김희정 위원님, 이 부대의견을 넣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정부안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의 변환을 끌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넣어 달라고 말씀드렸고, 부대의견 문구 불러 드렸으니까……

○소위원장 전용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까지 부대의견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대의견 때 다시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현재는 정부안 유지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권영진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한 것은 정부는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권영진, 철도계정 대구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매와 관련해서요.

○이연희 위원 거듭 말씀하신 대로 전쟁 추경하고는 별 상관 없어 보이는데, 또 전직 간사님의……

○손명수 위원 이종욱 위원이 전직 간사님을 배려하고 일단 여기서 통과.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해당 사업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정부 측에서는 다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동의」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한 것으로 알고 해당 심사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교통시설특별회계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손명수 위원 권영진 위원님 배려했으니까 이것도 위원장님 배려. 오케이?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해당 부분도 동의하신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희정 위원님께서 주신 부대의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위원장님, 잠시……

○소위원장 전용기 예,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4페이지에 보면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하고 크게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항목 중에서 두 번째, 김종양·박용갑·안태준·이연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마지막에 염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에 시스템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3건의 동의지만 위의 2건만 동의를 하고 마지막은 두 번째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염태영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염태영 위원 예.

○소위원장 전용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부대의견으로 가겠습니다.

부대의견 첫 번째 주신 의견이 조금 전에 주신 의견과 같습니까,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아닙니다, 다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희정 위원 예.

○소위원장 전용기 이 부대의견 문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지금 바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을 보고 심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저희가 제시를……

○소위원장 전용기 아니요, 지금 김희정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부분을 정부 측에 주시고 그걸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동의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고요. 그 시간에 행정실에서는 김희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대의견 안을 추가해서 정부 측에 제공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이 총 3건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통물류실 소관에서 1건 그다음에 두 번째 철도국 소관에서 1건 그리고 기존에 올라와 있던 3건이기 때문에 3건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건이 정리되는 대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회의가 2시에 있어서요 정회를 하고 나서 심사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오후 6시, 7시나 돼야 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오전에 매듭 지읍시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래서 10분 정회하고 그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김희정 위원 아니, 1시나 1시 반에 하면 되지.

○이연희 위원 한 10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희정 위원 국토가 그렇게 쉽게 안 끝나요.

○소위원장 전용기 국토 소관이 10분 안에 안 끝날 겁니다. 그래서……

○안태준 위원 될 수 있어요. 우리 이종욱 간사님이 다 정리하면 돼요.

○김희정 위원 회의를 1시나 1시 반에 속개합시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정회하고요. 1시나 1시 반에 개의해서 빨리 심사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본회의로 넘기는 걸로 해서 지금 여기서는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요. 최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국토부도 정회 시간을 활용해서 문제 지적을 하신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리해 주시기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전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내용 중 교통 분야 부대의견에 대해 위원님들 말씀을 토대로 전문위원실과 국토교통부가 협의안을 마련한 부대의견안을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욱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부대의견 두 가지 더 마련한 겁니다.

○손명수 위원 검토한다, 협의한다니까.

○김도읍 위원 잠시만.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세요.

○김도읍 위원 아까 손명수 위원님이 내가 손실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정확하게는 손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차관님? 여기는 부대의견에 또 손실이라고 적어놨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어쨌든 간 받아야 할 돈인데 못 받았으니까 손실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대의견 안건에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내년도 예산안이라고 못 박아 놓으면 어떻게 보면 시간에 쫓겨 가지고 제대로 된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안이라고 한정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대책방안을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등과 적극 협의한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어떨지 건의를 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도 아니고 예산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십시오. 차관님 의견은 속기에 들어간 거고 또 우리 위원들 의견은 이렇게 하는 결로 그렇게 하시지요.

○손명수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협의한다니까.

○소위원장 전용기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 분야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 분야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국토 분야 보류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류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오전 논의 내용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건 중에 1건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건 청년월세지원 650억 증액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의견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했고요. 그 밖에 기금 관련해서 배제된 것 말고 연구용역과 해외건설 컨설팅, ISP 수립,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서 오전에 부대의견의 범위에 대한 말씀을 주셨었는데 별도 지침이나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좁게 해석하자면 ‘의결된 예산안의 집행 방향 등 부수해서 권고하는 의견’이라고 좁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보다 넓게 해석해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공식적 의견에 부수하여 제시되는 의견’이라고 좀 넓게 보고, 실제 예결위에서도 최근 추경 심사 시에 추경안과 관련 없는 사업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정부안 유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은혜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김은혜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대의견 관련해서 손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세가율을 90%에서 최대 70%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금년 중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정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부대의견 5번·6번은 같은 말 아닙니까?

○손명수 위원 배준영 위원님만 동의해 주시면 이것 합쳐도 될 것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김도읍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같은 취지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5번·6번을 6번으로 정리하면서 배준영·김종양 위원 두 분이 한 걸로 성함만 변경 안 되나?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합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걸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번 안으로 하고 배준영 위원님과 김종양 위원님이 함께 부대의견 제시한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 분야 기획조정실 소관 1번부터 진행을 할까요?

정책연구개발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안을 유지시켜 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1·29 주택공급방안의 후속조치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공급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가 꼭 반영이 되어야지 남부권하고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교통 개선 대책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남부권·동부권이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남부권은 수서역세권부터 과천·성남·수원·호매실 그리고 의왕 이렇게 해서 29개 지구고요. 동부권은 남양주에서부터 서울 태릉CC까지 해서 17개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제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신도시를 하거나 주거를 다량으로 공급할 때 늘 문제가 됐던 것이 교통 문제 없이 입주만을 또 택지만을 주로 계획해서 공급하는 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선교통 후입주라고 하는 큰 틀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저는 이해하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작년 말에 올해 예산으로 들어왔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1·29 주택공급 대책으로 올해 1월 말에 지금 이와 같이 약 6만 호를 도심권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남부 쪽에, 우리 수원도 수원우편집중국이라든지 호매실 같은 사업들이 그 주택공급계획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지구 단위 쪽으로 각 교통계획은 나왔지만 이렇게 권역별로 크게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마 지금 하지 않으면 또 1년을 늦춘 가운데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늦어진다는 이렇게 보고서 예산을 추경에 담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주택공급대책이 더 이상 이런 일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큰 금액은 아니고 10억 수준인데 이 용역은 반드시 단계를 거쳐서 그 계획을 잡기로 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번에 주택공급 발표가 연초에 있고 나서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권역별 교통체계를 잡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정부안을 수용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본예산 이후에 공급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예산 심사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 의원실로도 많이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손명수 위원** 동의합니다.

이종욱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이종욱 위원** 아니요, 저는 이견……

어차피 지금 3개가 남은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3개 중에서, 다 추정 사유에 부적합하지만 그래도 본다면 이건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거냐, 왜 지금 들고 왔냐 그런 논의고.

그다음에 해외인프라 이쪽은 지금 명분은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잘 집행도 안 되고 했는데 이번이라고 잘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필요성은 어느 정도는 있는 반면에 ISP 쪽은 추정 사유로도 부적합하고 또 1억 3000으로 소액이고 그리고 이게 소액이지만 제가 국고국장도 했고 조달청장도 했고, 이게 조달시스템하고 계약시스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상생시스템 제도 처음 도입할 때도 제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추정에 1억 3000 넣어서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고 정부 전체적으로 입장 정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건 저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본예산이라고 그래 봤자 8월, 지금 요구했지요? 그렇지요? 요구해서 곧 심사하고 하니까 8월 달까지 한 서너 달 사이에 정부 입장 정리해서 필요하면 본예산 오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위원님, 이건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을지로 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재정부, 저희 국토부 그렇게 실무자들이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충분히 협의하면서 거기서 저희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나왔고요. 체불e제로시스템을 전자대금시스템으로 국토부에 설치한다는 것까지 합의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종욱 위원 약자들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을지로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걸 정부 전체로 보면 큰 시스템 변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대통령실이 주관을 하든 국무조정실이나 총리실이 주관을 하든 한번 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손명수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 전문가이신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저는 이종욱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부분은 큰 틀에서 하는 게 맞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달시스템이라는 정부의 큰 틀에서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조달은 우리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조달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건설 분야의 일용직들이나 이런 체불 문제가 특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대응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김에, 이 부분은 사실 소액이기도 하고 그런데 국토부 차원에서 지금 건설 분야의 이것도 이것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종욱 위원님 말씀 주신 바대로 정부 전체 조달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이런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별도로 또 하고, 둘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억 3000만 원을 추정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소액이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 당장 현장에서 체불 때문에 고통받는 그 일용직들을 생각하면 이런 노력이라도 하도록 해 주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염태영 위원** 사실은 이종욱 위원님의 그 우려에 대해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반영을 하는 게 좋으니까 부대의견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또 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잡고 이것을 이것대로 시간이 없는 가운데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저는 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어쨌든 반드시 정부 안에서 점검을 해 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불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전체적인 돈이 흘러가는 시스템을 바꾸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 한국은행에서 부처로 갔다가 계약을 거쳐서 각 기업체로 가는 그 돈의 흐름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체불 그 측면만 봐 가지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돈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큼니다, 시스템적으로. 어느 한 기관이 이 통로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다 내지는 점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더 큰 차원에서, 이건 국가 시스템을 건들기 때문에 점검해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을지로위원회에서 했다는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잘 용납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입니다.

○**윤종오 위원** 저도 한마디만 드릴게요.

하여튼 제 방이 아마 임금 체불된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방이기도 할 텐데, 제가 국토위 들어온 지 이제 2년 다 돼 가는 동안에 이런 임금 체불이나 또 이렇게 대금 지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고, 하여튼 이걸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만드니까 LH 같은 경우는 전자지급시스템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직접지급률이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잘되어서 민간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고.

또 이종욱 위원님 말씀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데 이런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좀 양해해 주시고,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웬만하면 좀 해 줍시다.

○**이건태 위원** 저도 한마디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취지로 저도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지금 건설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게 엄청 중요한 국가적인 현안이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저는 국토부가 낸 안이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가사 적용을 해 왔는데 다소 미진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시도는 꼭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부가 적정임금제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의 양극화 이 문제를 각 분야에서, 여러 방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가 지원해 주고 응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일단은 1억 3000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비용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계획이 수립되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을 편성할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맞습니다. 시스템 구축 사업비입니다.

○김도읍 위원 사업비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예상건대 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어느 정도 돼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34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 사업비 34억 원 정도를 내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이 정보화전략계획이, 올 연말 게 이 자리에서 심사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심사계획이 이종욱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정보화전략계획을 세웠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구축비 34억을 투입할지 말지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김도읍 위원 그러면 이종욱 위원님, 이게 전략계획 수립하는 데 1억 3000이 든다니까 일단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잡읍시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제 말씀이 정확하게 맞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김도읍 위원 전략계획 수립하는 게 1억 3000, 그다음에 이걸 토대로 내년에 시스템 구축비를 넣을지 말지는 이번 본예산 심사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 수립한다고 하니까, 제 소견은 넣어도 되지 않겠나……

○이종욱 위원 아니, 계속 같은 말씀 드렸는데……

○소위원장 전용기 말씀하십시오.

○이종욱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이렇게 별도 시스템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든 보완하든 그렇게 할 거냐는 거고.

그러면 이걸 만들면 가상계좌는 어디에 있어요? 실무자, 가상계좌는 어디 있어요? 누가 관리합니까?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건설산업정보망 안에 계좌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계좌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그 계좌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일반적으로 일반 계좌들이 은행 계좌인 것과 똑같이 이것도 은행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이자는 누가 가져가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환수를 하는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그 계좌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그 계좌 안에 있는 돈은 누가 송금해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발주자가 송금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상계좌로 들어

가 가지고……

○이종욱 위원 그 계좌가 어디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발주자가 원청사에다가 송금하는 돈을 입금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발주자가 국토부장관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주자가 국토부장관이면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어디 있어요, 처음에? 한국은행에 있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정부 예산 말씀하십니까?

○이종욱 위원 한국은행 국고 계좌에 있거든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예.

○이종욱 위원 그 돈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있는 누군가가 관리하는 기관한테 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그 사업이 발주되고 기성금이 나갈 때마다……

○이종욱 위원 그렇지요. 기성금이 나갈 때마다, 기성금이 나갈지 안 나갈지 이게 계약금인지 중도금인지 잔금인지는 각 부처에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조달 계약 같으면 조달청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요? 조달청에서 신호를 주잖아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지금 현재 쓰는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유사 시스템의 경우에도 조달청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달청 시스템과 당연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비용도 적은 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더 장점은 건설공사정보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로 체불을 막을 수 있다는……

○이종욱 위원 건설공사정보는, 거기 있는 사람이나 이런 거는 주가 아니고 종이라니까요. 주는 계약 상대방이잖아요. 계약 상대방이잖아, 갑을이 있잖아요, 갑을. 갑을은 누가 정하고 누가 관리하냐, 계약하는 데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조달청이라든지 철도공단이라든지 하잖아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각자 을이 되는 사람들이 등록하는 계좌 거기에다가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도 전자지급시스템이. 똑같이 각자 갑을이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자적 E계정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현재는 계약하고 딱 엮여 있는데 그거하고 계약시스템에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련 정보는 알고 있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기관의 별도 시스템을 대금직접지불시스템을 가지고 할 거냐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돈이 흐르고 흐르는 이 루트가 상당한 변화가 있다가니까요, 모르시겠지만.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상생페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형식의 에스크로형 계좌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상생페이 똑같은 거를 국토부가 가지고 싶다고 저는 들려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생페이가 재미있거든요. 자기가 그 계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수십 조가 왔다 갔다 하고 하루 이자만 해도 엄청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냐.

○손명수 위원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이종욱 위원 아니, 내 말은 그래서 그 시스템을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

질 거냐 아니면 기존의 조달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느냐니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저도 출납공무원을 했고 지출관을 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금의 집행 구조를 압니다. 당연히 그 구조에 따라 가지고 자금이 배분이 됩니다. 다만 가상계좌라는 것이 있어서 가상계좌로 돈이 들어온다고 할 때 사실 거기에는 이제 E머니라는 형태로 있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그 옆에 병행해 가지고 은행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이종욱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현금은 사실상 은행 계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냥 조달청 시스템 자금 따로 하는 게 있잖아요. LH, 한전, 조달청 다 따로 하지요. 그렇지요? 따로따로 받주 하잖아요, 시스템도 다르고. 거기를 가상계좌 방식으로 바꾸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별도 시스템을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검토했느냐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조달청의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업무가 종료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주한 곳에서 등록한 계좌에다가 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써 조달청의 기능이 종료되는 것이고 저희는 건설공사 전체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썼을 경우에 대금이 지급되는 것과 공사의 기성 과정이 함께 건설공사정보망 안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대금지급시스템까지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차원이고 그건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상계좌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하면 더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기다 섞지 마시고, 지금 대금 체불 관례해서 가상계좌 방식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 저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나 조달시스템이나 각 개별 발주 기관의 시스템을 다 업그레이드하고 고치면 되는데 왜 별도로 기관을 만들어서 하나 이거지요, 시스템이 엉클어지게.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봤냐, 봤다고 그러면 오케이하겠는데 안 본 것 같아서 제가 몇 달간 그걸 보고 다시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이런 개념의 시스템을 수년간 운영해 가지고 체불을 제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종욱 위원 그러면 철도공단 시스템을 조달청이나 다른 데나 똑같이 적용하면 되잖아요, 철도공단도 했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그런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는 이런 실물 계좌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체불 제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철도공단은 하는데 조달청은 못 한다는 거예요?

○염태영 위원 사실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계속 체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의 시스템으로 다 바꿀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하는데 저희가 볼 때 다른 부처의 모든 것도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건 그것대로 하고 지금 이것은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정보의 불일치를 막기 위한 첫 단계 용역을 하는 거라 사실은 이것은 좀 인정을 해 주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전 부처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과 통일됐을 때 무슨 문제는 없는지는 별도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점점을 하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이 일은 이 일대로 추진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김희정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토부 일하는 스타일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금시스템 구축 계획 이번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요식행위로 사업 1억 3000 써먹고 그러니까 본예산 34억 가지고 오려고 그냥 자락 까는 예산을 가지고 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당신들 도대체 지금 이 사전계획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준비하고 있냐 그러면 계획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는데 본인들이 지금 거의 요식행위로 가는 걸로 들고 왔는데…… 1억 3000이면 수의계약 됩니까, 안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안 됩니다.

○**김희정 위원** 안 되지요. 그런데 ISP 사업자 선정을 5월에 끝내서 과업 수행을 5월에서 9월에 하고 용역 준공 10월에 하시겠다고요? 이 절차대로 해도 본예산에 넣는 거는 원래는 위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능한 달을 들고 오신 것 같으세요? 5월 안에 선정 끝낼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 아니고?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 위원님, 공정건설지원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찰 사업자 선정까지 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저희 국토부나 행안부나 미리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끝내는 걸로 목표를 잡고 추진 중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예산 가지도 않았는데 사업자 선정하고 있다는 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염태영 위원** 앞에 앉은 사람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왜 이렇게 큰소리를 쳐요?

○**김희정 위원** 저 답이 타당한 답변으로 보입니까?

○**염태영 위원** 다 들리잖아요. 좀 작게 해도 되잖아요.

○**김도읍 위원** 아니, 염태영 위원님 가만 계세요. 위원이 정부를 상대로 이야기하는데.

○**염태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목소리는 높여요.

○**김도읍 위원** 들어 봐도 그럴 만하잖아요, 지금.

○**김희정 위원** 제가 서류로 여기 오기 전에 미리 물었는데 그 답변과 아까 차관과 국장과 담당 과장의 답변이 엇갈릴뿐더러 제가 그 문제 지적을 했더니 지금 와서 정부 추경예산을 4월에 하고 있는데 문제 지적이 본예산 가기 위해서 그냥 다음번 본예산 들고 왔을 때 당신들이 이미 지난번에 1억 3000 용역 맡겼고 그것 그냥 부대되는 거니까 올라올 자락 깔고 있는 거 아니냐, 행정적으로 절차적 프로세스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했더니 다시 지금 점심시간 동안에 달 바뀌어서 가지고 왔는데 불가능한 달을 적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사업자 선정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정부 사업 용역 공고 나가고 그래요?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미리 한 건 아니고요……

○김희정 위원 무슨 사업 공고 나갈지 사업자들에게 미리 정보가 다 나가 가지고 다 이제 현장에 준비시켜 뒀기 때문에 이거 방망이 두들기자마자 미리 업체들 준비 다 돼 있으니까 그 업체들만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선정하겠네요. 말은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미리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발주청이라든가 저희 국토부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당연히 사업자 선정을 미리 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회의가 5분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희정 위원 사업자 계획 공고, 제안서 접수, 평가, 협상, 계약까지 통상 얼마 걸립니까?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 통상 한 2개월 정도……

○김희정 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5월에 끝내고 5월에 끝나자마자 수행은 5월부터 하는 걸로 또 적어 뒀네요.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 예, 맞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5월 말일에 끝내고 말일부터 들어가는 거를 5월로 적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정하는 데 통상 2개월 걸린다면서요.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 말씀드린 것은 통상……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앞뒤 말에 답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소위원장 전용기 이거 추가적으로 논의를 저희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정리만 좀 하면요, 우선 1번 기획조정실 소관의 정책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건가요?

○김도읍 위원 그거는 제가 좀……

차관님, 이제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결론을 내야 되는데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권 출범하면서 6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김도읍 위원 됐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광역교통체계 개선이 사업비가 들어온 거예요, 연구비가. 문재인 정권 때 공급대책 내놨다가 실패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이재명 정권 때 다시 하는데 이걸 내게 된 게 결국은 1·29 공급대책이 성공하고 부실했다 이거 자인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그건……

○김도읍 위원 아니, 웃지 마시고.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과천이라든지 이런 쪽의 주민들께서 반발하는 게 뭐니까? 태릉도 아마 마찬가지로 싶은데 교통대란이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문재인 정권 때 이 지역에 공급대책 냈을 때도 똑같은 반발이었고 그래서 못 했고 이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급대책

을 똑같이 냈고 똑같은 반발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습책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1·29 공급대책 공급방안 발표할 때 광역교통 개선을 하겠다고 분명히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은 교통대란 이런 걸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발표를 했고 저희가 광역교통개선협의체를 지자체하고 구성해서 논의를 해 보니 이 광역교통개선책을 좀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담아 온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은 우리 당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해야지요. 국토부장관이 12월 말에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게 제 기억으로 10월 전후로 해 가지고 국토위 전체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1월 29일 날 벌써 최소 두 달, 석 달이 지나고 이 발표를 했던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주민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1·29 공급대책이 완벽하게 잘됐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전용기 잠깐만요.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분 남았습니다. 본회의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요.

○김도읍 위원 차관님, 그거는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잘됐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용기 여기서 안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본회의가 있는 관계로 첫 번째 방안이 정회했다가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회의를 속개하는 방안이 있고 내일 오전 10시 전체회의 전에 개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내일 오전 9시에 개최하는 방안을 제의드립니다.

9시든 9시 반이든 그 부분은 양당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그 전까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 오전에 회의를 다시 개최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및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김도읍 김종양 김희정 손명수 안태준 염태영 윤종오 이건태 이연희 이종욱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오세일
입법심의관 이유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이탁
제2차관 홍지선
국토도시실장 정의경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종합교통정책관 정채교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단장 한성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박지홍